

고용노동부 - 중증장애인 지역 맞춤형 취업 지원

<사업 기본정보>

- 사업유형/세부유형 : 고용서비스사업/취업지원
- 소관부처/담당부서 : 고용노동부/장애인고용과
- '21년 평가등급 : 개선필요(감액)

1 사업 주요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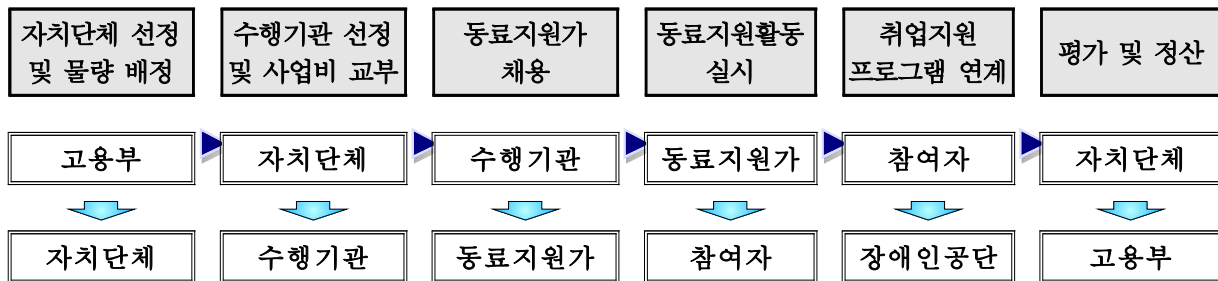
- ☐ (사업 목적) 동료상담, 자조모임 등 동료지원 활동을 통해 비경제활동 또는 실업 상태에 있는 중증장애인의 취업의욕 고취하여 경제활동을 촉진
- ☐ (사업내용) 기본운영비 동료지원가 1인당 80만원(월 60시간 기준), 취업연계 성공수당 1인당 20만원, 참여자 1일 3천원(최대 10회) 지급
- ☐ (예산/재원) 2,914백만원('21년)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 * 지자체 위임, 보조율 50%

(단위: 백만원, %)

사 업 명	'20년			'21년 예산(B)	증감(B-A)	
	본예산 (A)	추경	결산			(%)
<input type="checkbox"/> 중증장애인 지역 맞춤형 취업지원	2,951	2,951	1,150 (39.0)	2,914	△37	△1.3

- ☐ (추진근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5조
- ☐ (지원대상) 중증장애인 중 일할 의사가 있는 장애인 10,000명

□ 전달체계



□ 전년 대비 주요 개편사항

구 분	2020년	2021년	비 고
참여자 수	10,000명	10,000명	
동료지원가 수	500명	500명	
기본운영비	동료지원가 1인당 480천원 (기본 5회활동)	동료지원가 1인당 800천원 (월60시간 기준)	동료지원가 인건비 보장
취업 연계수당	참여자 1인 당 200천원	참여자 1인 당 200천원	
참여자수당	참여자 1인 당 3천원	참여자 1인 당 3천원	
양성교육	3일 18~20시간 (1일 6~7시간)	5일 18~20시간 (1일 3~4시간)	중증장애인 교육수강 부담 완화
참여자 보험 가입 주체	광역자치단체	수행기관	사업 참여 중증장애인의 안전 보장
총 예산	2,951백만원	2,914백만원	△ 37백만원

2 정량지표 평가 결과

□ (참여자 현황) 중증장애인 지역 맞춤형 취업지원 사업의 2020년 순참여자는 총 1,801명으로 고용서비스 전체 참여자의 0.1%, 취업지원 유형 전체 참여자의 0.2%

○ (성별) 본 사업 참여자 중 남성은 60.9%(1,096명), 여성은 38.9%(701명)로 남성 참여자의 비율이 높음

- (연령별) 본 사업의 참여자 중 청년이 49.3%(888명)로 가장 많고, 중년 36.9%(664명), 장년 11.1%(200명), 고령 2.4%(44명) 순

(단위: 명, %)

	전체	성별		연령별			
		남성	여성	청년 (15~34세)	중년 (35~54세)	장년 (55~64세)	고령 (65세이상)
고용서비스 전체	1,325,058 (100)	463,784 (35.0)	861,144 (65.0)	538,237 (40.6)	383,290 (28.9)	299,872 (22.6)	101,177 (7.6)
취업지원 전체	1,017,639 (100)	341,169 (33.5)	676,414 (66.5)	377,175 (37.1)	331,244 (32.6)	236,242 (23.2)	70,630 (6.9)
중증장애인 지역 맞춤형 취업지원	1,801 (100)	1,096 (60.9)	701 (38.9)	888 (49.3)	664 (36.9)	200 (11.1)	44 (2.4)

주1: 성별, 연령별로 분류불능이 존재하여 각 비율의 합은 100%가 되지 않을 수 있음

주2: 참여시작일이 '20년 1월~11월인 참여자의 순인원 현황임

□ 정량지표별 결과

(단위: %, 일)

	취업률 (180일 이내)	알선 취업률 (180일 이내)	고용 유지율 (180일 이상)	취업 소요기간	임금수준
고용서비스 전체	42.2	27.3	57.8	113.7	79.5
취업지원 전체	42.2	27.3	57.8	113.7	79.5
중증장애인 지역 맞춤형 취업지원	6.5	-	50.3	189.3	46.2

3 정성지표 평가 결과

- 사업의 중요성 측면에서, 노동시장 진출이 어려운 대표적인 취약 집단인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고용서비스 제공과 취업지원을 위한 동료지원가 사업은 정부 일자리 사업으로서 그 중요성이 인정됨
- (국정과제) 동 사업은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맞춤형 사회 보장(국정과제 42) 관련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살아가는 자립생활환경 조성을 통해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 실현에 기여하는 사업

- **(노동시장 상황)** 장애인구 중 비경제활동인구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비경제활동·실업상태의 중증장애인을 노동시장에서 보호할 필요성이 있음. 특히, 장애인 노동시장의 특성을 반영하여 그 능력에 맞게 직업지도 및 직업알선을 하는 것은 수요중심 맞춤형 안정적 일자리 기반을 만드는 데 기여
- **(법적 근거)** 관련 법령 및 5개년 계획에 따라, 장애인이 직접 다양한 지역사회에서 장애인의 취업지원 활동에 참여하는 지역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시행('19년 시범사업 후 '20년 신규 도입)
 -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조제2항, 제7조1항, 제10조1항, 제15조1항,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5개년 계획")
- **(내역사업목적)** 동 사업은 비경제활동 또는 실업 상태에 있는 중증 장애인에게 동료상담, 자조모임과 같은 동료 지원 활동을 통해 취업의욕을 고취하여 경제활동을 촉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일자리사업 성과 측면에서, 동료지원가의 민간일 자리를 창출하여 보호 필요성이 있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일자리사업으로서 노동시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침. 그러나, 전달체계 측면에서 수행기관과 공단 등 각 단계별 연계실적은 구체적으로 성과를 알기 어려움
- **(사업대상)** 중증장애인 실업자 및 비경제활동인구 중 일할 의사가 있는 장애인 10,000명에 대해 동료지원활동을 실시하는 것으로 보호 필요성이 높은 중증장애인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
- **(동료지원가 민간일자리 창출)** 동료지원가는 같은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사업 참여대상자들을 지원하며, 2019년 120명 대비 2020년 134명으로 민간일자리 창출 효과
- **(취업 연계실적)** 참여자의 취업 연계실적은 '19년 6.9%→ '20년 16.9%로 상승하여 중증장애인의 취업의욕을 고취시킴
 - * 참여자 실적은 ('19년) 3,451명→('20년) 2,101명으로 전년도에 비해 1,350명이 감소한 반면, 취업연계 실적은 ('19년) 237건→('20년) 356건으로 전년도에 비해 2.5배 가량 증가. ('20년) 2,101명은 "참여자 횟수(연인원 1명 최대 10회 참여가능)" 기준으로 작성 (해당 부처 내부자료)

- (실적 보고) 동료지원가 선발과 교육, 동료지원가의 자조 모임 활동, 참여자 취업지원 서비스 연계 및 취업자 사후지도 등 연계실적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필요. 취업지원 프로그램으로서의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및 유관사업과의 연계 강화 노력 필요
- 운영의 적절성 측면에서 사업계획은 적절하였고, 예산배분도 체계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나, 코로나19로 인한 사업 부진으로 예산 집행실적은 저조
 - (지침 및 실행계획 등의 타당성) 기존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견된 애로사항 및 사업 개선사항을 반영하여 사업계획은 적절히 구성되었고, 지역에 따른 예산배분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짐
 - * 국비 및 지자체 재정을 1:1로 지역별 사업 공모를 통하여 지자체 선정 및 물량을 배정함. 동료지원가(참여자)의 11개 지자체 평균은 9.1%(9.1%), 서울·수도권 평균은 12.1%(13.4%), 광역시 평균은 7.7%(6.1%), 전라권 평균은 9.0%(8.4%), 경상권 평균은 10.4%(10.5%)로 지역별 수요를 반영하여 운영 (해당부처 내부자료)
 - (집행성과) 코로나19에 대응한 비대면상담을 추진하였으나, 장애인 시설의 휴관 및 대면상담 기피 등 참여자 모집이 어려워지면서 지자체 및 수행기관의 사업참여 포기 및 부진에 따라 집행을 39%로 예산 집행실적은 다소 저조
 - * '19년 예산집행률 92.9%, '20년 2,951백만원→ 1,150백만원 (해당부처 내부자료)
- 제도개선 측면에서, 2019년 시범사업 추진 이후 장애인단체 의견 수렴, 지자체 및 사업수행기관 간담회, 국회지적사항에 대한 제도 개선 및 지침 변경에 대한 노력
 - 장애인 특성을 고려하여 교육부담을 완화하고(총 18~20시간, 3일→5일), 상담실적에 비례한 기본운영비 책정방식을 변경하여 동료지원가의 인건비를 보장 개선 노력
 - * 상담실적 5회 시 48만원→(변경) 월 80만원(월60시간 기준), 기본상담 10회→ 5회 (해당부처 내부자료)

4 개선권고

□ 평가 결과 : 개선필요(감액)

- 중증장애인 지역 맞춤형 취업 지원사업은 장애인 특수성을 고려한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유사 사업과의 연계 노력이 중요함. 취업 지원 프로그램과의 연계실적, 장애인에게 특화된 교육내용 등 사업의 질 개선을 위해 체계적인 관리체계 마련
 - ‘동료지원가’, ‘지역 맞춤형’, ‘중증장애인’, ‘취업지원’ 등 사업명에 적합한 사업 관리
 - 지자체의 사업계획, 사업목표 변경 등 자율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동료지원가 교육 시 장애 유형 별 다양한 내용이 전달될 수 있는 노력 필요
- (유형 재분류) 고용서비스사업→ 장애인지원고용(신설)
 - 장애인취업지원사업을 별도의 유형으로 신설하고, 보다 체계적으로 개편하여 관리하는 것을 고려
 - * OECD의 노동시장정책 분류체계에서 장애인지원사업은 “보호고용 및 재활 (Sheltered and Supported Employment and Rehabilitation)”로 별도 분류
 - 고용서비스 목적에 따라, 진로상담, 교육 등 인프라 강화사업인지, 취업 지원인지를 재분류하여 관리. 장애 정도에 따른 그룹화, 유형 간 비교를 통해 장애인 대상 유사·중복성 사업은 통폐합
- 중증장애인 대상 사업을 관리하는 하되, 평가등급 산정 대상 사업에서는 제외
 - 일반대상자와 동일선상에서 정량 성과를 산출하여, 다른 사업과의 성과 비교보다는 중증장애인의 ‘사회적응을 기반으로 한 취업’이라는 궁극적 목표 달성을 위한 중간 단계로서 고용서비스 제공을 동 사업 취지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